

2013년 주요정책 추진 성과

2014. 2. 13.



교육부
Ministry of Education

1 국정과제 추진 성과

【초·중등 교육】

1. 중학교 자유학기제

□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, 진로·체험활동의 확대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업 흥미도 상승

※ (학생) “다양한 체험활동과 협동학습으로 학교가 즐거워졌어요”

• 학교생활 만족도 : (사전) 3.34 → (사후) 3.72 / 42개 연구학교 학생 7,457명 대상

※ (교원) “교수·학습이 개선되고, 학생들의 변화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요”

2. 학교폭력·학교안전

□ 범부처 협업과 민·관 합동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,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

※ “현장 중심의 학교폭력대책” 수립('13. 7월)

※ 피해응답률 감소 : 9.6%('12) → 2.1%('13)

○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로 피해학생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점차 개선

※ 학급당 예방교육 시간 : 149분('12. 2학기) → 203분(36.4% ↑, '13. 1학기)

※ 피해학생 고통에 공감 : 69.9%('12 하반기) → 74.4%('13 상반기) → 76.6%('13 하반기)

○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병·의원 등 전문기관 서비스와 연계 실시

※ 초1·4, 중1, 고1(210만명) 대상 실시, 위기학생 관심군 4.9%(약 10만명)

3. 예술·체육·인성교육

□ 바른 인성 함양과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예술·체육교육 활성화 및 교실수업 및 학교문화 변화를 위한 민간·유관부처와 협업

※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수 : 208,730명('12) → 334,522명('13)

※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학교 수 : 300교('12) → 400교('13)

4. 대학입시 간소화

- “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”(13. 10월)에 따라 전형방법 수를 축소하고 학생부 반영 비율을 확대

※ 대학별 전형방법 수 : 6.76개('14학년도) → 4.15개('15학년도)

※ 학생부 반영 비율 : 44.5%('14학년도) → 54.6%('15학년도)

※ 대입간소화 방안에 대한 지지율('13.9월) : 학부모 88.8%, 교사 91.8%, 대학 67.6%

5. 교원 교육전념 여건 조성

- 교원평가제도 개선 1단계 시범운영, 학교단위 교무행정업무지원팀 운영 확대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기반 구축

※ 교원행정업무지원팀 구성율 : 60.6%('12) → 76.0%('13)

【고등 교육】

1. 인문학 진흥

- 인문학 연구자 역량 제고와 함께 연구 성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급하여 인문학 재도약의 계기 마련

※ 인문한국(HK)사업 결과 저술 1,900여권, 논문 4,200여편 발표('08~'13)

※ 총 46,597명의 국민이 시민인문강좌·석학인문강좌 참여('13)

2. 대학생 창업 활성화

- “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”을 수립(13.9월)하고 창업 친화적 대학 여건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

※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내용 :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마련,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, 지방대학 창업역량 강화 및 창업 우호적 사회문화 조성 등

3. 산학협력 활성화

- 산학협력선도대학(LINC) 사업 추진 및 BK21플러스 사업 신설 등으로 산업체 수요 등을 고려한 창의인재 육성 초석 마련

※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: 670건('12) → 1,230건('13)

4. 지방대학 지원 확대

- 지방대 육성법 제정('13.12월) 및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확대 개편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

※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내용 : 지역인재 채용확대 등

※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('14, 2,031억원) : 기존 교육역량강화사업('13) 대비 40% 증액

5.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

- “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” 마련('13. 10월) 및 “고등교육 재정 지원계획” 수립('13. 12월)으로 현 정부 대학 정책 청사진 제시

※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: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구축, 산학협력·평생학습, 연구역량강화, 대학교육혁신 등 4개 영역 13개 과제 제시

※ 고등교육 재정 지원 계획 :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, 지방대·전문대 지원 확대, 대학 특성화 사업 신설 등 재정지원 사업 재편

- “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” 수립('14. 1월)으로 체계적인 정원감축과 평가체제 개선으로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방향 제시

※ 주요 내용 : '23년까지 16만명 감축 등 정원감축 규모 제시, 정량·정성 평가 병행 등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, 법적·제도적 기반 마련 등

【능력중심사회 구현】

1.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

-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직무능력중심 교육 토대 마련

- 교육부·고용노동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NCS 및 학습모듈 개발

※ NCS 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“NCS 운영위원회”(교육부·고용부 차관 공동 위원장)와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“NCS 구축 협업 T/F” 구성·운영

※ NCS 254개 개발, NCS 학습모듈 55개 개발

-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고·전문대학 교육과정 개편 추진

※ (특성화고) NCS 교육과정 시범운영(3개교), 교원연수((46개 과정, 526명)

※ (전문대학) NCS 교육과정 시범개발(63개교 161개 학과, 교원연수(3개 권역, 600명)

- NCS 기반으로 일-교육-자격을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(NQF) 구축 기본계획 수립

2.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

-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지원으로 전략산업 분야 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기반 마련

※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: 123교('12.) → 201교('13.)

※ 마이스터고 : 37교('12.) → 39교('13, 해외건설·조선해양플랜트 분야)

- 취업희망자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, 고졸 취업을 지속적으로 확대

※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: 정원의 2.1%('13학년도) → 10.9%('14학년도)

※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: 16.7%('09) → 25.9%('11) → 40.9%('13)

※ 마이스터고 1기 졸업생 취업률 : 90.3%('13. 4월)

- 고졸 재직자가 일·학습을 병행 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 시행 대학을 확충하고, 전문·희소계열의 후진학을 위한 대표 대학 지정

※ 재직자 특별전형 시행 : 3교('10학년도) → 70교('13학년도) → 87교('14학년도)

※ 전문·희소계열 대표 대학 지정·운영 : 농업·마사 등 4개분야 7교

3.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

- 100세 시대 대비 “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(‘13~‘17)” 수립으로 전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 로드맵 마련

※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, 온·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,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등 4개 영역 29개 과제 제시

- 읍·면·동 단위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‘평생교육법’ 개정으로 시·도, 시·군·구, 읍·면·동으로 연계되는 평생학습 지원체제 마련

※ 읍·면·동 행복학습센터 84개('13년 시범운영), 시·군·구 평생학습도시 118개('13, 신규 28개) 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 10개('13, 신규 3개)

-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성인친화적 대학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현장호응도가 높은 베이비부머를 위한 비학위 과정 운영
 - ※ 참여 대학·학과(25교 69개 → 47교 147개), 수혜자(8,273명 → 14,435명)

【교육비 부담 경감】

1.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충

- 농어촌 학생, 다문화·탈북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“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” 수립(’13.11월)

※ 농어촌 ICT 지원 : 300교(’13), 1군 1우수중학교 : 20교(’13)
 다문화 예비학교 : 26교(’12), 52교(’13)

2. 장애·학력부진 학생 등 맞춤형 교육지원

- 특수학교 신·증설 등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

※ 특수학교/학급 : 156교/13,013개(’12) → 163교/13,612개(’13)
 ※ 특수교원 정원 : 9,416명(’12) → 10,072명(’13, 656명 증원)
 ※ 학습종합클리닉센터 : 32개소(’12) → 129개소(’13)

3. 누리과정 확대 및 돌봄기능 강화

- 만3~5세 누리과정 모든 가구에 월22만원씩을 지원하고 초등돌봄 교실 전면확대에 대비 시범학교 운영(78교)

- 지역돌봄협의체 구축(178개)을 통해 돌봄 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

4. 교육비 부담 경감

- 소득연계 대학 반값등록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금리 지속 인하

※ 대학 반값등록금 지원 : 34.0%(’12) → 42.8%(’13)
 ※ 학자금 대출금리 : 3.9%(’12) → 2.9%(’13)

5. 사교육 부담 경감

- 다각적인 정책 지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은 감소 추세이며 사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('12, 34%)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도 감소
 - ※ 1인당 월 사교육비(만원) : 24.2('09) → 24.0('10) → 24.0('11) → 23.6('12)
 - ※ 영어 사교육비 및 참여율 : 7.1조원, 55%('09) → 6.4조원, 46.3%('12)

2 범정부 역점정책

【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】

- 국립대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성회 수당 폐지 등 선도적으로 비합리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
 - 국립대 공무원 직원 : 기성회회계 사용 “급여보조성 경비” 지급 중단('13. 9월)
 - 사립대 교직원 : 연금 대납 금지 및 대납금 보전 조치 마련('13. 11월)
 - 국립대 병원 : 직원 등의 진료비 감면 제도 개선('13. 7월)
- 현재 총 6개(교육부 주관 4개, 타부처 협업 2개) 과제를 추가로 발굴·선정하여 T/F 구성·운영 및 관련규정 마련 등 추진 중
 - (예시) 수능이후 형식적 수업관행 개선(현재 T/F 팀 구성·운영), 교장임용제청 배제 기준 강화(규정 마련 중), 유치원 방과후 과정 비용 부담완화 등

☞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이 솔선하여 정상화 적극 추진

【공공기관 경영 정상화】

-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방침에 적극 부응하여 교육부문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으로도 확산 중

과제	주요 추진실적
산하 공공기관간 혁신의지 공유	산하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를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('14. 1. 27, 장관 주재 120명 참석)

과제	주요 추진실적
이행계획 수립	- 중점관리 대상 기관 이행계획 수립 ('14. 1월) * 한국장학재단 : 대출 상환 관리 강화를 통해 재단체 발행 하향 * 부산대학교병원 : 1인당 복리후생비 20% 이상 감축 - 공공기관 외 산하기관의 정상화 이행계획 수립 ('14. 3월)

☞ 교육부 산하 21개 공공기관 및 그 외 기관에도 방만경영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본격적인 정상화 노력 경주

【고용률 70%】

-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 강화, 취업중심의 고용행태 변화를 위한 창업교육 기반 조성 및 선취업 후진학 기반 강화 등 역점 추진

<주요 과제 및 추진 실적>

과제	주요 추진실적
대학·연구소의 창업기지화	·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 발표('13. 9. 6, 미래부·중기청 합동) · '13년 산학연협력 EXPO 개최('13. 10월) ·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법률」 개정('12. 12월)
NCS 기반의 직무 능력 중심체제로 전환	· NCS 학습모듈 개발계획 수립('13. 6월), 착수('13. 9월) · 「자격기본법시행령」 개정완료('13. 10월) · 국가역량체계(NQF) 구축 로드맵 수립('13. 12월)
선취업후진학 지원확대	· 전문대학 육성방안 발표('13. 7. 18) ·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('13. 5월) · 근무경력 학점인정을 위한 「고등교육법」 개정('13. 8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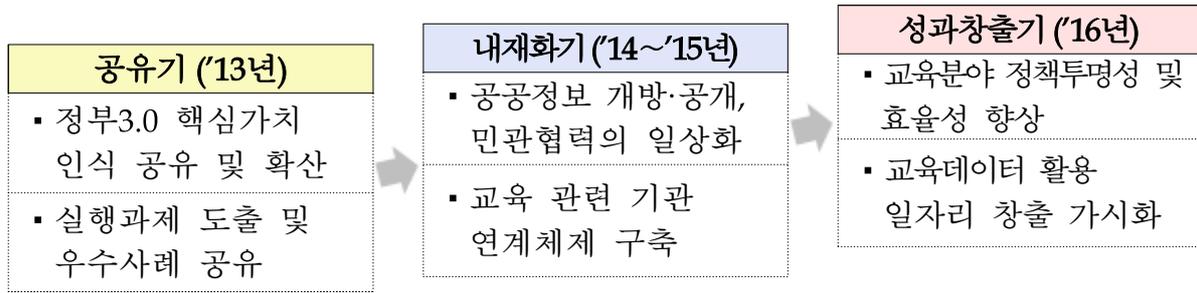
☞ 고용시장 미스매치 완화 등에 필수적인 직무능력 중심 교육 지속 추진 및 이에 따른 고용문화 개선을 위해 고용부 등과 협업 강화

【정부3.0】

- 정부3.0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교육부로 탈바꿈
 - 교육부 정부3.0 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(3회), 산하기관 등 워크숍(5회), 정부 3.0day 운영(매월 30일, 3회), 부내 및 시·도교육청 평가와 연계 등

○ 시·도교육청 및 대학, 공공기관의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

※ “응답하라, 정부3.0-2013교육부(사례집)”, “실록3.0, 역사를 깨우다(영상)” 등 제작·보급



☞ 관련 부처·국민과의 소통·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정책 품질 제고 및 교육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한 만족도 제고 노력 지속
